

##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1년 2개월 실형

적폐청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불법 파견 은폐 재벌 앞잡이 고위 관료 처벌 않고 감싸



법원이 자본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하며, 민주노조 파괴를 기획, 주도한 심종두, 김주목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관을 받던 두 범죄자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심종두와 김주목은 168개 기업의 노무관리를 맡았고 민주노총 소속 14개 노조를 무너뜨렸다.

유성기업과 발레오 자본 등은 창조컨설팅의 기획대로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을 차별대우하며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노조파괴 피해 사업장 조합원들은 여전히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창조컨설팅이 기업노조 설립과 관련한 법 규정과 세부절차를 검토하고, 문건을 작성해 사측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심종두와 김주목이 기업노조 설립에 개입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가 막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으며, 헌법 33조 1항에 명시한 노동 삼권을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종두와 김주목이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노조파괴를 주도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종두와 김주목이 저지른 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야만적인 노조파괴를 범죄로 규정하고, 노조파괴 당

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도성대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늦장 판결을 지적하며 “심종두와 김주목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지 7-8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판결이 나와 아쉽다”라고 말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를 돕기보다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노조파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다”라며 “노조파괴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무수히 많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형량이 낮아 실망스럽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조파괴 범죄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특별재판부 설치로 양승태 구속·적폐 법관 탄핵하라”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 “국회가 사법 농단 수수방관 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이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는 8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사법 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는 “다수의 현직 대법관들이 사법 농단 사태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조차 기각하고 있다. 그 사이 물증 자료들이 없어져 실제적 진실 발견도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실시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 탄핵소추 등을 요구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사

법 농단에 관한 특별법은 재판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라고 밝혔다.

송상교 사무처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법과 제도로는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다. 특별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사법 농단 피해자들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다시 받고, 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송상교 사무처장은 “국정조사와 연루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뜻과 의지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진상조사와 사후처리에 나서야 할 국회가 직무유기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국회는 당장 국정 조사와 책임 있는 법관을 탄핵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농단 사태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국회의는 ‘특별법과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등 3대 입법 과제 실현’을 국회에 촉구하고 지역 순회 토론회와 각계각층 시국선언 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9월 1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양승태 구속 처벌, 적폐 법관 탄핵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 대표자들은 기울어진 법원 저울을 ‘법관 탄핵, 양승태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라고 쓰인 팻말을 달아 바로 잡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16연대, 참여연대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번 사법 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짓고 지난 6월부터 공동행동에 나섰다.